

중고령계층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반정호*

I. 머리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고용구조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의 증가 등 거시경제적인 영향과 더불어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의 증대가 야기될 것이며, 고령자계층 개별적으로는 수명연장과 건강악화 및 경제력의 약화 등에 따른 삶의 형태(life-span)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송하승, 2006). 이에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계층에게 있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세대의 주거비 완화정책은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에게 경제적인 지원의 기능을 하며, 노인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주거환경은 육체적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안정된 주거환경은 물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화, 대화의 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 인적자원의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자기개발의 공간(space)으로 기능할 것이다(Dorvil et. al, 2005).

현재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수준은 진전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그 관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주택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택지공급,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조세지원 등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없고, 공공임대주택 배분에 있어서도 노인가구에 대한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낮다.¹⁾ 주거관련 연구분야에서 역시 권위 있는 학자들이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축으로 주거정책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jhban@kli.re.kr).

1)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물량이 총 공급량의 10% 정도 배정되었으나 실제 노인가구가 입주한 실적은 배정물량의 15~3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은 그다지 많지 않다(Kemeny, 2001; Dewilde & Keulenaer, 2003에서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정책이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데 이는 주거빈곤의 경계(threshold)가 되는 최저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에 대한 설정과 합의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데다 주거환경을 다룰 수 있는 자료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0월에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으로서 정책지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거현실과 정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4년 8월에 수정된 최저주거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주거실태나 주거빈곤에 대한 공식적인 지표가 제시됨에 따라 주거빈곤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중고령층의 주거빈곤 실태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1차년도 조사와 8차년도 조사자료이다.

II.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및 주거빈곤 실태

1. 최저주거기준

주거빈곤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빈곤선(housing povety line)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개념을 주거부문으로 적용하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저주거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의 주거는 절대적 주거빈곤이며, 우리 사회의 평균 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상태는 상대적 주거빈곤이라 정의된다(하성규, 1997). 여기에서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저주거수준을 살펴보는 것으로 주거빈곤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인체공학적 측면, 주거생활의 필수성,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주거기준을 도출하되 우리나라의 주거수준과 정부재정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하여 지표가 개발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주택의 구조와 성능의 환경기준 등에 따라 그 지표가 설정되는데 본고에서는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을 적용한 지표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별(부부, 자녀성별, 나이 등)로 필요한 침실면적과 부엌, 화장실 등 기타 면적을 합산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산정된다. <표 1>은 2004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최소주거면적을 기초한 최저주거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다. 4인가구(부부+자녀 2명)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주거수준은 식사실 겸 부엌과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

한 방의 개수가 3개 확보되는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총주거면적을 11.2평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침실 1개와 부엌(총주거면적 기준 3.6평)을 갖춘 주거 시설로 최저주거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6인 가구(노부모+부부+자녀 2명)는 침실 4개와 부엌(총주거면적 기준 14.8평)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주거빈곤 가구에 해당된다.

<표 1>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 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 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 3	4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 2	5 DK	49 (14.8평)

주: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나타냄.
 자료: 건설교통부(2004), 「최저주거기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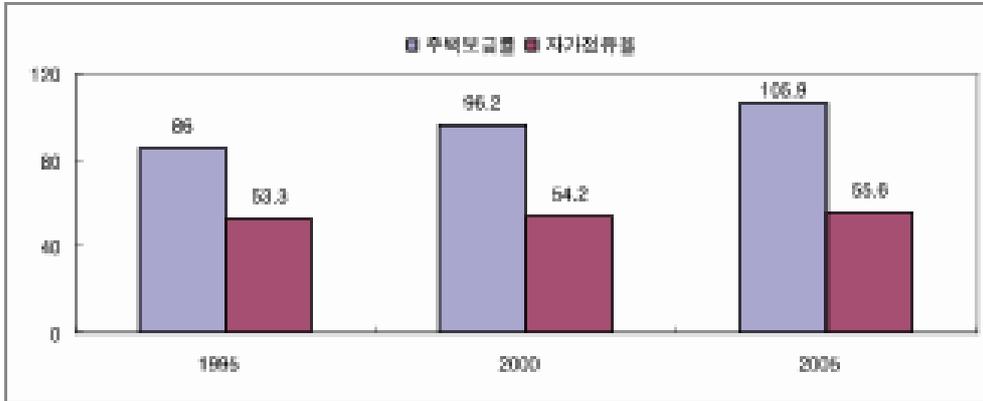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및 주거빈곤 실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가점유율은 55%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수가 가구수보다 많아졌지만 정작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과 2005년 빈집을 포함한 주택 재고는 175만 가구, 혈연가구는 56만1천 가구가 늘어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05.9%로 증가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10년간 자가점유율의 변화가 2.3%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가 2005년 기준 22.4%로 2000년(28.2%)에 비해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의 『주택수요조사』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5백60만 가구 중 16.3%인 2백55만 가구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은 2000년 조사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추정한 결과 전체 조사가구의 약 23.1%가 주거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3.4%, 서울지역이 23.5%, 부산지역이 26.7%, 대구지역이

26.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주택보급률 및 자가점유율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표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및 지역별 비교

(단위: %)

	전 체	주거빈곤가구	침실수 미달	전용부엌 및 화장실 미달	중복미달
가구수	14,312	3,306	2,090	744	472
비 율	100	23.1	14.6	5.2	3.3
지 역	2000		2005		
전 국	100		100		
수도권	33.7		30.9		
서울	17.1		14.5		
인천	3.4		4.4		
경기	13.2		12.0		
지방	66.3		69.1		
부산	8.3		9.0		
대구	5.6		4.9		
광주	2.3		3.0		
대전	2.1		2.3		
울산	1.8		1.6		
강원	4.5		4.3		
충북	3.5		3.6		
충남	4.6		4.8		
전북	5.1		5.8		
전남	7.3		7.1		
경북	10.9		10.8		
경남	8.7		10.7		
제주	1.6		1.1		

자료: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분석자료.
 국토연구원(2005), 『주택수요조사』 결과분석자료.

3. OECD 국가들의 경험²⁾

OECD의 주요 회원국들은 거의 대부분 최저주거기준이나 주거빈곤선 등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 주거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19년 Tudor Walters Report에서 주택의 규모, 설비기준 등을 제시한 것을 기초로 주택행정기관에서 정부교부금의 지급 및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주거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은 1957년의 Koln 기준으로 이는 IFH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가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가족규모별 최소필요면적을 각국이 최대한 이를 확보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공공주택에 적용할 주택최저기준 마련보다는 민간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Housing Code의 형태를 채택했다. 이 Housing Code는 위생, 설비, 구조 등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규정과 1인당 주거면적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주거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1976년부터 주택건설 계획 및 주택정책의 기준으로서 최저주거개념을 사용해 왔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주택통계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면적기준에 있어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별도로 집계하여 이를 토대로 주택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인 가구의 최저면적기준은 50.0㎡이며 유도주거기준을 91.0㎡로 설정해 이 유도기준에 도달하도록 다양한 주거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II. 실증분석

1. 분석자료와 변수

본고에서는 주거빈곤의 실태와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자료(1998년 조사)와 8차 자료(2005년 조사) 2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구성은 가구의 정보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45세 이상 중고령 가구주의 개인자료와 가구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2개년 자료의 결합을 통해 조사시점의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동사항을 조정했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주거빈곤

2) 이 부분은 하성규(1997)의 글을 많이 이용하였다.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최저주거수준 이하의 가구를 주거빈곤가구로 정의한다. 주거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중고령계층의 배경변수와 인구학적 가용성 변수, 경제적 가능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로는 성, 연령, 부모의 학력수준, 본인의 학력수준, 결혼상태, 지역 등의 변수가 분석모형에 투입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가용성³⁾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건강상태와 가구원수를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마지막 경제적 가능성 변수는 해당가구의 월평균 총소득과 연구대상자의 현재 고용상태 변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래의 <표 3>은 실증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속성과 변수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속성

		변수명	변수설명(변수값)	속성
종속변수		주거빈곤 주거비빈곤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1) 최저주거수준 초과가구(0)	dummy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성	남성(1) 여성(2)	dummy
		연령	연구대상자의 연령	연속변수
		부모의 학력	초졸(1) 중졸(2) 고졸(3) 대학 이상(4)	dummy
		본인의 학력	초졸(1) 중졸(2) 고졸(3) 대학 이상(4)	dummy
		결혼상태	유배우자(1) 무배우자(0)	dummy
		지역	서울(1) 광역권(2) 도지역(3)	dummy
	인구사회학적 가용성 변수	건강상태	양호(1) 보통(2) 불량(3)	dummy
		가구원수	연구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수	연속변수
	경제적 가능성 변수	해당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근로+금융+부동산+사회보험+기타소득)	연속변수
고용상태		미취업 및 비경활(1) 비임금(2) 비정규직(3) 정규직(4)	dummy	

주 : 설명변수는 8차 조사자료에서 측정하고 있는 변수값임.

2. 분석결과

<표 5>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난 표본가구(1,179가구)의 주거실태 및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빈곤가구는 15.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토연구원이 2005년 실시한 『주택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주거빈곤율(1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빈곤가구의 여성

3) Goldscheider와 Goldscheider(1989)는 인구학적 가용성(availability) 및 경제적인 가능성(feasibility)을 노인층의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정경희, 2006에서 재인용). 인구학적 가용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구원수와 건강상태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경제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소득의 수준과 노동시장의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구주 비중(33.5%)이 주거비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학력수준이 낮은 범주에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소득을 적용한 빈곤연구에서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가구주와 저학력계층의 주거빈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주거빈곤 가구주의 결혼상태를 보면, 유배우자 가구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데 비해 주거비빈곤 가구주는 68%로 주거빈곤 지위에 따라 약 8%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이 주거비빈곤가구에 비해 약 5%포인트 정도 높고, 광역도시 지역 역시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이 약 2%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도단위 지역에서는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이 주거비

<표 4> 표본의 기술통계량

(단위 : %)

변수명		전 체	주거빈곤	주거비빈곤
표본(1,179가구)		100.0	15.2	84.8
성	남성가구주	73.7	66.5	75.0
	여성가구주	26.3	33.5	25.0
연령	평균연령(세)	60.9	60.6	61.0
부모 학력수준	초졸 이하	82.3	83.8	82.0
	중졸 이하	7.8	5.0	8.3
	고졸 이하	5.4	6.7	5.2
	대학 이상	4.5	4.5	4.5
본인 학력수준	초졸 이하	30.9	40.2	29.2
	중졸 이하	20.4	16.8	21.0
	고졸 이하	30.6	31.8	30.4
	대학 이상	18.2	11.2	19.4
결혼상태	유배우자	66.0	55.9	67.8
	무배우자	34.0	44.1	32.2
지역	서울	26.9	30.7	26.2
	광역시권	32.3	34.1	32.0
	도지역	40.8	35.2	41.8
입주형태	자가	54.7	25.7	59.9
	전세	30.8	36.3	29.8
	월세 및 기타	14.5	38.0	10.3
건강상태	양호	32.0	29.1	32.5
	보통	35.1	31.8	35.7
	불량	32.9	39.1	31.8
가구원수	평균가구원수	3.44	3.28	3.47
가구소득	가구의 총소득(월평균 만원)	41.94	39.60	42.36
본인근로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월평균 만원)	97.55	86.01	99.61
고용상태	미취업 및 비경활	45.3	41.0	46.0
	비임금근로	22.6	25.8	22.0
	비정규직 근로	12.6	16.9	11.9
	정규직 근로	19.6	16.3	20.2

주: 입주형태와 본인의 근로소득 변수는 주거빈곤여부 변수와의 상관성이 지나치게 높아 회귀모형에서는 제외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빈곤가구에 비해 약 5%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주거빈곤에는 지역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입주형태의 경우, 주거빈곤가구의 약 38% 정도는 월세의 형태로 입주하고 있는데 반해, 주거비빈곤가구는 약 10% 정도만이 월세의 형태로 입주하고 있었다. 반대로 주거빈곤가구의 자가소유 비중은 26%에 비해 주거비빈곤가구의 자가소유 비중은 60%로 그 비중이 있어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주거빈곤 가구주의 약 40% 정도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본가구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주거빈곤가구의 비임금근로와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주거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규직 근로나 미취업(혹은 비경황)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5>는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주거빈곤가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 중에서는 본인의 학력과 결혼상태, 지역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가용성 측면에서는 건강상태 변수와 경제적 가능성 측면에서 고용상태 변수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수 중에서 학력변수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 가구주에 비해 초졸 이하의 가구주 및 고졸 이하의 가구주의 주거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졸 이상과 초졸 이하의 학력범주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저학력 가구주의 주거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그렇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주거빈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변수의 경우는 도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이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약 1.6배 정도 높고 광역도시 지역은 약 1.4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가용성 측면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건강상태는 노동능력에 대한 직·간접적 지표인 동시에 한 개인의 가용자원을 대표하기도 한다. 분석결과는 가구주의 불량한 건강이 주거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능성 측면에서 고용상태 변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주거빈곤 가능성을 약 1.5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빈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에서 근로하는 가구주, 즉 경제적 가능성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

<표 5> 중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단위 : %)

	변수명	전 체	
		B	EXP(B)
성	상수	-0.883	0.413
	남성가구주	0.194	1.214
연령	연령	-0.016	0.984
부모학력	초졸 이하(대학이상)	-0.158	0.854
	중졸 이하	-0.560	0.571
	고졸 이하	0.233	1.262
본인학력	초졸 이하(대학이상)	0.848	2.335**
	중졸 이하	0.234	1.264
	고졸 이하	0.495	1.641#
결혼상태	유배우자	-0.480	0.619*
지역	서울(도지역)	0.495	1.640*
	광역시권	0.307	1.359#
건강상태	양호(불량)	-0.319	0.727#
	보통	-0.319	0.727#
가구원수	평균가구원수	-0.050	0.951
가구소득	가구의 총소득	-0.001	0.999
고용상태	미취업/비경활(정규직근로)	-0.139	0.870
	비임금근로	0.434	1.543#
	비정규직근로	0.377	1.458
chi-squarer		39.875**	
-2LL		953.467	

주 : #p<0.1, *p<0.05, **p<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는 것으로 해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제기되는 중고령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실태와 주거빈곤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총량적인 수준에서 주택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점유형태 역시 크게 향상되지 않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주거빈곤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고령자 가구의 약 15%가 주거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력계층 및 여성의 주거빈곤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는 주거빈곤의 지역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가용성(건강수준)과 경제적 가용성(고용상태)의 효과를 추정하

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주거빈곤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조세지원 등의 거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학력계층 및 여성, 건강수준이 열악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이들의 주거안정수단을 강구하는 미시적인 주거복지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4), 『최저주거기준』, 보도자료.

송하승(2006),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 국토연구원.

정경희(2006),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02~127.

하성규(1997), 「OECD 가입과 한국의 주거복지」, 『지역사회개발연구』 22(1),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pp.323~344.

Goldscheider, F. K & C. Goldscheider(1989),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pmy”, in F. K. Goldscheider and C. Goldscheider(eds.),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 Boulder, CO: Westview, pp.185~197.

Dorbil, H., Morin, P., Beaulieu A. & D. Robert(2005), “Housing as a Social Integration Factor for People Classified as Mentally III”, *Housing Studies* 20(3), pp.497~519.

Keneny, J.(2001), “Comparative Housing and Welfare: Theorising the Relationship”,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16, pp.53~70.

Dewilde, C. & F. D. Keulenaer(2003), “Housing and Poverty: The ‘Missing Link’ ”,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3(2), pp.127~153.